미래위 총서 22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조사

A Study on Resource Mobility for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2005. 8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정윤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김희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제출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삼 식

연구요약

Ⅰ.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이래 20년 이상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출산율이 지속되어 2000년대에는 1.2 미만의 최저출산율(lowest low fertility) 현상을 유지해 옴.

○ 저출산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가 미래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논의 중인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및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의 설계 및 진행

가. 조사 내용

□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별도세금 징수, 국채발행, 교통세 등 목적세의 존속 및 사용용도 전환, 기업에 대한 수출부담금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저출산 대책을 위해 도입 가능한 여러 정책들 중 보육료 및 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과 직장 일간의 양립 제고, 임신 및 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

나. 조사 방법

□ 사회, 복지, 경제, 고용, 보육, 교육 등 관련학회 중 교수회원수 200인 이상인 학회를 선정 전체 1,0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실시

○ 회수율: 26.3%

Ⅱ. 저출산 현상 및 국가지원에 대한 의식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2.7%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의 93.5%가 찬성함.

□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으로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지원'이 6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15.7%)',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10.7%)', '기준없이 동등하게 지원(4.6%)'의 순으로 나타남.

Ⅲ. 저출산대책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0.4%를 차지하였음.

□ 2006년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존속시키되, 그 세입의 일부를 저출산・육아 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6.2%로 나타남.

□ 매년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의 차액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응답자의 65.1%였음.

□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 의견이 응답자의 63.5%로 '찬성한다'는 의견(36.5%)에 비해 많았음.

□ 저출산 대책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43.2%)',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14.7%)','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11.2%)',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9.7%)'의 순으로 나타났음.

Ⅳ.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1.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

□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의 우선순위

○ 보육료·교육비 부담경감,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의 순

2.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지도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매우 심각 64.4%, 대체로 심각 32.2%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63.8% 매우 심각, 29.8% 대체로 심각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59.5% 매우심각, 35.1% 대체로 심각

□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60.4% 매우 심각, 27.1% 대체로 심각

나. 정책우선순위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 관련 견해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97.7% 찬성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94.6% 찬성

□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89.6% 찬성

다.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관련 견해

□ 전문가들은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과 상관없이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음.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43.2%, 반대 56.8%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44.6%, 반대 55.4%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40.5%, 반대 59.5%

○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31.3%, 반대 68.7%

라. 정책우선순위별 교통세 사용용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전문가들은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과 상관없이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여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음.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제시한 경우 찬성 64.8%, 반대 35.2%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68.1%, 반대 31.9%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75.6%, 반대 24.4%

○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64.6%, 반대 35.4%

마. 정책우선순위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 전문가들은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과 상관없이 국채를 발행하여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제시한 경우 찬성 29.9%, 반대 70.1%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38.3%, 반대 61.7%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29.7%, 반대 70.3%

○ 자녀 양육과 직장일 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39.6%, 반대 60.4%

바. 정책우선순위별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 전문가들은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과 상관없이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경향이 우세함.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1순위 기준)의 경우 반대비율 63.7%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의 경우 반대 57.4%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반대 56.8%

○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의 경우 반대 70.8%

사.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견해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등을 1순위로 응답한 모든 경우

⇒ 교통세 사용 용도전환, 별도의 세금징수, 국채발행,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순

아. 정책우선순위별 가구지원기준에 대한 견해

□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등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 가구지원기준으로 자녀수와 가구소득수준 동시고려, 자녀수, 가구소득수준, 기준 없이 동등지원 순

□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 가구지원기준으로 자녀수와 가구소득수준 동시고려, 가구소득수준, 자녀수, 기준 없이 동등지원 순

차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및 방법 ····· 4
제3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

제2장 저출산 현상 및 국가지원에 대한 의식 ····· 9
제1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 9
제2절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 11
제3절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 13

제3장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 15
제1절 재원확보방안별 전문가 의견 ····· 15
제2절 가장 바람직한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관련 의견 ····· 23

제4장 저출산대책 정책우선순위관련 의견 ····· 25
제1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27
제2절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대책관련 의식 ····· 29

제5장 결론 ····· 55

[부록 1] 설문지 ····· 59
[부록 2] 통계표 ····· 65

표목차

〈표 1-1〉 10개 관련학회 회원현황 및 응답자 수 ····· 6
〈표 1-2〉 응답 전문가의 일반 특성 ····· 8
〈표 2-1〉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식 ····· 10
〈표 2-2〉 전문가의 특성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식 ····· 12
〈표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 ····· 14
〈표 3-1〉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 ····· 16
〈표 3-2〉 전문가 특성별 교통세 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 18
〈표 3-3〉 전문가 특성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 20
〈표 3-4〉 전문가 특성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 21
〈표 3-5〉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 방안관련 전문가 의견 ····· 22
〈표 3-6〉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 24
〈표 4-1〉 저출산대책관련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8
〈표 4-2〉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 31
〈표 4-3〉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 31
〈표 4-4〉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출산력 제고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 34
〈표 4-5〉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출산력 제고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 34

〈표 4- 6〉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관련 견해 ····· 37
〈표 4- 7〉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관련 견해 ····· 37
〈표 4- 8〉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교통세의 저출산대책 사용에 대한 견해 ····· 40
〈표 4- 9〉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교통세의 저출산대책 사용에 대한 견해 ····· 40
〈표 4-10〉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 43
〈표 4-11〉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 43
〈표 4-12〉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기업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 46
〈표 4-13〉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기업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 46
〈표 4-14〉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 50
〈표 4-15〉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 50
〈표 4-16〉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 53
〈표 4-17〉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 54

그림목차

〔그림 2-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 9
〔그림 2-2〕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식 ····· 11
〔그림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 13
〔그림 3-1〕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 징수에 대한 견해 ···· 16
〔그림 3-2〕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 17
〔그림 3-3〕 국채발행으로 저출산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 19
〔그림 3-4〕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21
〔그림 3-6〕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24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20년 이상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져 1.2 미만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최저출산율(lowest low fertility) 현상을 유지해 왔으며 200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16으로 발표되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저출산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가속화가 미래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정책들을 검토 중에 있다.

저출산 원인은 개인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현상 전반에 걸쳐있는 관계로 보다 많은 분야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서구사회의 예를 들어보면, 저출산대책은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 여성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조세정책, 경제정책 등 많은 부문을 망라하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출산은 개인이나 가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가 출산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출산율이 급상승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환언하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보다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 최소화하면서 출산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국민세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무자녀 또는 소자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의 일부가 다자녀가정으로 전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미혼인구의 세금이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전이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조세방식을 찬성하나 다른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세방식을 반대하는 이른바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출산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 다른 방안들도 각자의 이해도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택되는 어떠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도 국민의 공감대(consensus)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대책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회, 복지, 경제, 고용, 보육, 교육 등 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물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별도로 실시된 바 있다. 일반국민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는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그 연속선상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출산대책 관련 재원확보 방안 이외 가능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서 우편조사 회수율은 26.3%(263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총 263명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단순통계표에 의존하며,

항목간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카이제곱분석도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는 정책입안자 및 관련 연구가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저출산 현황 및 국가지원에 대한 의식, 제3장에서는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제4장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으로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현황 및 국가예산지원에 관한 항목 3개,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항목 5개, 저출산대책 우선순위에 관한 항목 8개, 응답자 기본특성에 관한 항목이 6개이다.

저출산현황 및 국가지원에 관한 항목 들 중 저출산현황에 관한 질문은 최근의 저출산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의 의식이 4점 리커어트 척도로 조사되었다(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대체로 삼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다자녀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태도는 4점 리커어트 척도로 조사되었다(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자녀를 둔 가구의 지원 기준에 관해서는 자녀수, 소득수준, 자녀수와 소득수준 등에 관해 바람직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저출산대책관련 재원확보방안으로는 별도의 세금 징수, 국채발행, 교통세 등 목적세의 사용용도 전환, 기업에 대한 수출부담금제 도입 등 4개 방안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이들 각각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태도도 4점 리커어트 척도로 조사되었다(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대책관련 재원확보방안들간의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재원확보방안들 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질문되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가능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고안된 대책들로는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임신·출산 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이다. 끝으로 응답자의 일반특성에는 성, 연령, 전공, 소속기관, 근속기간, 연구연수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 조사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수록한 조사표(양식)를 참조하도록 한다.

2. 표본추출

전문가의견조사의 조사대상으로는 총 1,000명의 전문가들이 선정되었다.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층화계통추출법(stratified-systematic sampling method)이 적용되었다. 표본추출 단계로 우선 인문사회분야의 학회들이 선정되었다. 표본추출대상이 되는 학회로는 저출산 관련된 학회로서 사회, 복지, 경제, 고용, 보육・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교수회원수가 200인 이상인 학회이다. 그러한 학회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등 총 10개 학회가 선정되었다.[1)]

일차적으로 선정된 10개의 학회에 대해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통해 회원명부를 입수하였다. 입수된 명부(표본틀)에 의거하여, 학회별 회원을 합하여 전체 회원수를 집계하였다. 계획된 조사대상규모(1,000명)는 학회별 회원수의 규모

1) 한국인구학회는 위 표본대상학회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제외되었으나, 그 회원들 대부분이 한국사회학회 등 다른 학회에도 소속되어 있어 실제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에 비례하여 할당하였으며, 각 회원별로 할당된 표본규모는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가나다... 순으로 배열된 회원을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 선정된 1,000명의 전문가와 관련학회 현황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 표 1-1〉 10개 관련학회 회원 현황 및 응답자 수

(단위: 명,%)

학회명	회원수[1]	표본수	응답자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65	30	8 (26.7)
한국지방재정학회	533	102	27 (26.5)
한국아동학회	1,161	223	11 (4.9)
한국사회복지학회	470	91	21 (23.1)
한국가족학회	336	64	17 (26.6)
한국사회학회	407	78	28 (35.9)
한국행정학회	1,481	286	71 (24.8)
한국사회보장학회	397	78	14 (17.9)
한국노동경제학회	314	25	9 (36.0)
한국유아교육학회	129	23	9 (39.1)
계	5,394	1,000	263 (26.3)[2]

주: 1) 학회별 회원수는 각 학회에서 제공한 명부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회원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응답자수 총계는 조사표상 소속 학회를 알 수 없었던 48건을 포함함.

3. 조사방법

조사방법으로는 우편조사(mailing survey)가 적용되었다. 조사는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 기간동안 실시되었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조사표는 2005년 7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1,000명의 전문가 각자에게 송부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한 후 조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에 7월 18일까지 반송하도록 당부하는 안내문도 함께 송부하였다.

회수율이 낮은 우편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표 발송 후에 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표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전화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완성된 조사표를 수령한 후에는 무응답 등 조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전화상으로 재차 확인하여 조사의 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조사표 수는 총 263건으로 26.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제3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263명의 일반 특성은 <표 1-2>에 제시하였다. 응답 전문가들의 성별은 남성 74.5%(196명), 여성 25.5%(67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57.8%, 50세 이상이 42.2%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 전문가의 전공은 행정학이 35.0%로 가장 많았고 기타 23.2%, 사회학 14.8%, 사회복지학 13.7%, 경제학 13.3%의 순이었다.

응답자가 전공분야에 대해 연구한 기간은 10-20년 미만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25년 미만(28.5%), 25년 이상(24.0%), 10년 이하(12.9%)였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75.7%로 대다수가 대학교

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소속기관에서의 근무년수는 10년 이하가 37.6%, 10-20년 미만이 31.2%, 20년 이상이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응답 전문가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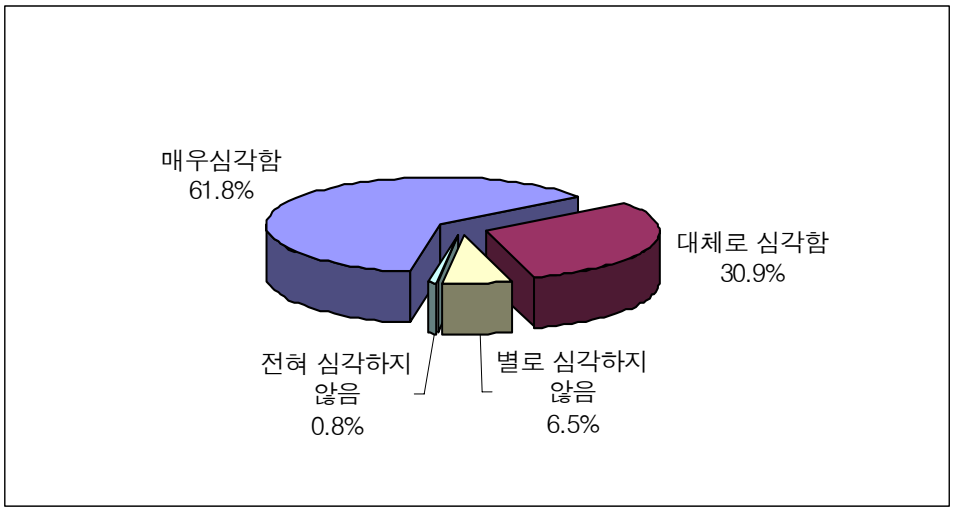
구분		계(명)
성	남자	74.5(196)
	여자	25.5(67)
연령	50세 미만	57.8(152)
	50세 이상	42.2(111)
전공	행정학	35.0(92)
	경제학	13.3(35)
	사회학	14.8(39)
	사회복지학	13.7(36)
	기타	23.2(61)
연구 년수	10년 미만	12.9(34)
	10-20년 미만	30.8(81)
	20-25년 미만	28.5(75)
	25년 이상	24.0(63)
	무응답	3.8(10)
소속 기관	대학	75.7(199)
	기타	24.3(64)
근무 년수	10년 미만	37.6(99)
	10～20년 미만	31.2(82)
	20년 이상	27.4(72)
	무응답	3.8(10)
계		100.0(263)

제2장 저출산 현상 및 국가지원에 대한 의식

제1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저출산 현상의 장기간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해석은 향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2-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식을 묻은 결과(그림 2-1 참조),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61.8%, '대체로 심각한 문제이다' 30.9%이었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6.5%,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8%에

불과하였다. 전문가의 92.7%가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성별, 연령별 및 전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1 참조). 이는 특성에 관계없이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현재의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2)]

〈표 2-1〉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식

구분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수준				계(N)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전체	61.8	30.9	6.5	0.8	100.0(262)
성별(x^2=5.44, df=4, p=0.25)					
남자	59.7	33.2	6.6	0.5	100.0(196)
여자	68.2	24.2	6.1	1.5	100.0(66)
연령별(x^2=3.44, df=4, p=0.49)					
50세 미만	60.9	29.8	8.6	0.7	100.0(151)
50세 이상	63.1	32.4	3.6	0.9	100.0(111)
전공별(x^2=17.23, df=16, p=0.37)					
행정학	59.8	35.9	4.3	0.0	100.0(92)
경제학	45.7	42.9	8.6	2.9	100.0(35)
사회복지학	75.0	22.2	2.8	0.0	100.0(36)
사회학	64.1	28.2	7.7	0.0	100.0(39)
기타	65.0	23.3	10.0	1.7	100.0(60)

주: 1) 무응답 1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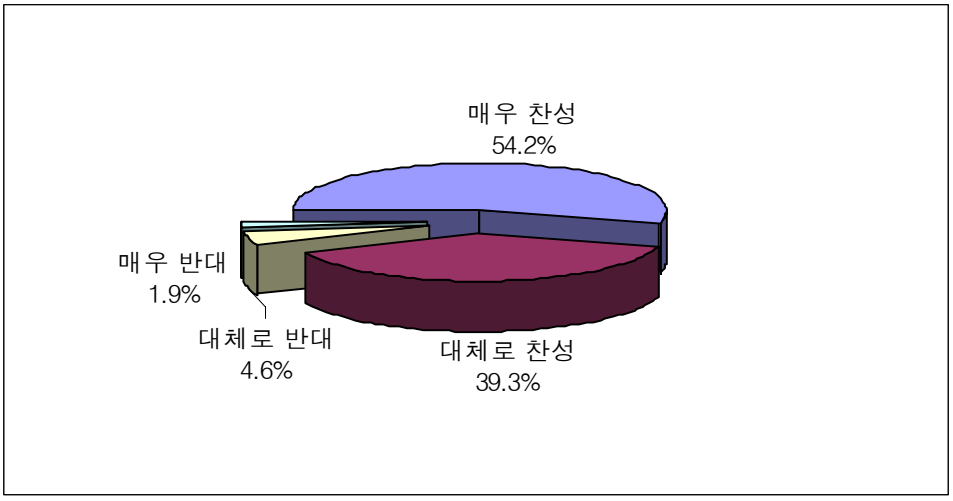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 결과, 20~44세 기혼여성의 81.1%, 20~44세 미혼남성의 75.2%, 20~44세 미혼여성의 78.6%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제2절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전체 국민의 세금 등에 의해 마련된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주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체제에서 일부 집단(예를 들어, 비혼인구, 소자녀가정 등)은 출산과 관련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출산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해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4.2%,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9.3%로 전문가의 93.5%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2 참조). 반면, 국가의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은 6.5%에 불과해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식



전문가의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찬성의견이 98.5%로 남성 9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2 참조). 이는 전문가집단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육아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전문가의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에서 94.8%, 50세 이상에서 91.8%가 찬성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의 전공별로는 경제학 전공의 응답자가 타 전공에 비해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매우 찬성 34.3%, 대체로 찬성 48.6%, 반대 17.4%).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예산지원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나 타 부문에서의 예산지원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 전문가의 특성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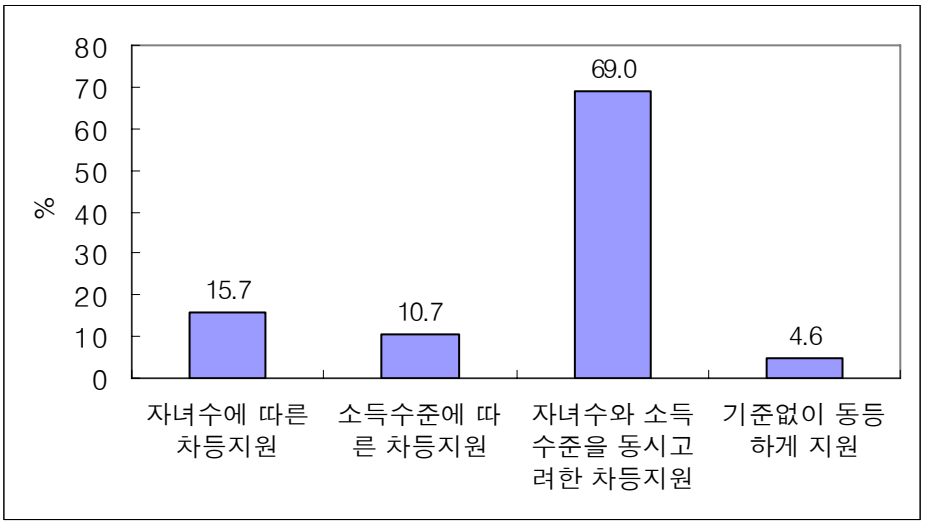
구분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식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체	54.2	39.3	4.6	1.9	100.0(262)
성별(x^2=10.16 df=4 p=0.04)					
남자	50.0	41.8	5.6	2.6	100.0(196)
여자	66.7	31.8	1.5	0.0	100.0(66)
연령별(x^2=2.78 df=4 p=0.60)					
50세 미만	55.3	39.5	3.3	2.0	100.0(152)
50세 이상	52.7	39.1	6.4	1.8	100.0(110)
전공별(x^2=29.44 df=16 p=0.02)					
행정학	54.3	37.0	7.6	1.1	100.0(92)
경제학	34.3	48.6	8.6	8.6	100.0(35)
사회복지학	61.1	38.9	0.0	0.0	100.0(36)
사회학	50.0	50.0	0.0	0.0	100.0(38)
기타	63.9	31.1	3.3	1.6	100.0(61)

주: 1) 무응답 1명 제외.

제3절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외국의 사례를 통해볼 때, 국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 특히,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양하다. 서구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로는 자녀수, 소득수준, 혼인상태, 모의 취업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가구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구지원기준을 결정하는 데에 지원기준의 실효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림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출산 지원시 정부의 가구지원 기준으로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15.7%)',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10.7%)',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4.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참조). 이는 정부가 출산지원을 위해 가구에 지원을 할 경우, 가구소득 수준과 자녀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전문가의 특성별로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기준에 대한 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2-3 참조). 다만, 전공별로 볼 때($p<0.1$), 사회복지학과 경제학 전공자는 자녀수+소득수준 기준, 자녀수, 소득수준, 기준없이 동등 순으로 나타난 반면, 행정학과 사회학 전공자는 자녀수+소득수준, 소득수준, 자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의견이 전공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으로 경제학이나 사회복지 전공자는 소득수준보다는 자녀수 기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				계(N)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전 체	15.7	10.7	69.0	4.6	100.0(261)
성별(χ^2=5.11, df=4, p=0.28)					
남자	17.9	9.2	68.4	4.1	100.0(195)
여자	9.1	15.2	69.7	6.1	100.0(66)
연령별(χ^2=3.41, df=4, p=0.49)					
50세 미만	15.2	10.6	67.5	6.6	100.0(151)
50세 이상	16.4	10.9	70.9	1.8	100.0(110)
전공별(χ^2=24.22, df=16, p=0.08)					
행정학	9.8	15.2	71.7	3.3	100.0(92)
경제학	22.9	5.7	62.9	8.6	100.0(35)
사회복지학	20.0	2.9	65.7	11.4	100.0(35)
사회학	18.4	18.4	63.2	0.0	100.0(39)
기타	16.4	6.6	73.8	3.3	100.0(61)

주: 1) 무응답 2명 제외.

제3장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달라 질 수 있다. 부담이 특정 집단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그 저항은 거세질 것이며, 이는 자칫 정책의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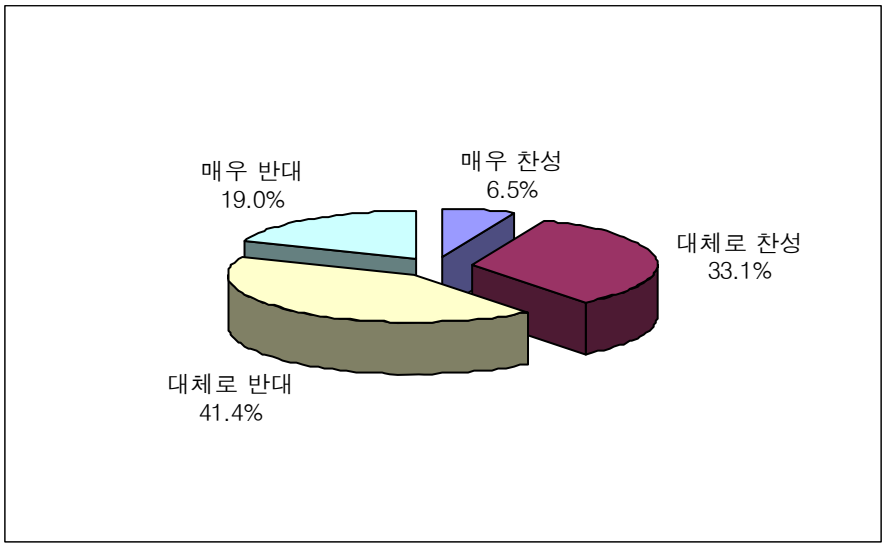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에는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4가지 방안이 포함되었다.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 교통세 사용용도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국채발행으로 저출산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 그리고 저출산・육아지원 정책으로 미래에 혜택을 받는 집단인 기업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수출부담금제 도입방안이 해당된다.

제1절 재원확보방안별 전문가 의견

1.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 방안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6.5%, ‘대체로 찬성한다’ 33.1%, ‘대체로 반대한다’ 41.4%, ‘매우 반대한다’ 19.0%로 반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0.4%로 나타났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 징수에 대한 견해



〈표 3-1〉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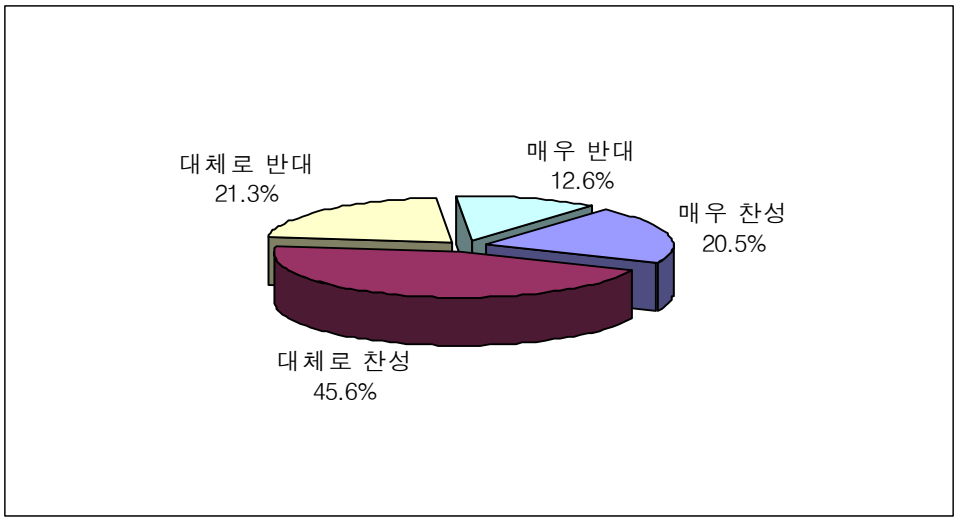
구분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 체	6.5	33.1	41.4	19.0	100.0(263)
성별(x^2=1.24, df=3, p=0.74)					
남자	7.1	34.2	40.3	18.4	100.0(196)
여자	4.5	29.9	44.8	20.9	100.0(67)
연령별(x^2=1.25, df=3, p=0.97)					
50세 미만	6.6	34.2	40.8	18.4	100.0(152)
50세 이상	6.3	31.5	42.3	19.8	100.0(111)
전공별(x^2=11.29, df=12, p=0.50)					
행정학	5.4	34.8	39.1	20.7	100.0(92)
경제학	0.0	31.4	45.7	22.9	100.0(35)
사회복지학	8.3	47.2	33.3	11.1	100.0(36)
사회학	12.8	25.6	43.6	17.9	100.0(39)
기타	6.6	27.9	45.9	19.7	100.0(61)

이는 전문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이 높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경우 국민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전문가의 성별, 연령별 및 전공별로 저출산대책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2.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사용 방안

2006년도에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존속시키되, 그 세입의 일부를 저출산·육아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5%,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45.6%,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21.3%,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12.6%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6.2%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가 성별로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 동 의견에 대해 남성 전문가 중 60.7%가 찬성하는데 반해 여성 전문가는 82.1%가 찬성하고 있다. 이는 여성 전문가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해서라도 출산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전공별($p<0.1$)로는 경제학자들의 찬성비율이 54.3%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행정학자는 61.9%, 사회복지학자 69.5%, 사회학자 74.4% 등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경제학자들이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사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위 견해에 대한 전문가의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수준).

〈표 3-2〉 전문가 특성별 교통세 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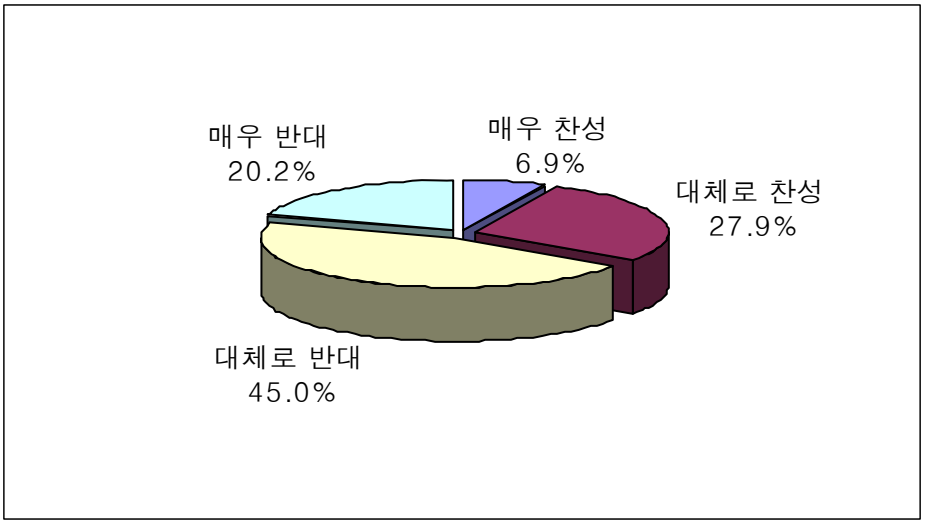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교통세 용도 전환을 통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	20.5	45.6	21.3	12.6	100.0(263)
성별(χ^2=10.72, df=3, p=0.01)					
남자	18.9	41.8	24.0	15.3	100.0(196)
여자	25.4	56.7	13.4	4.5	100.0(67)
연령별(χ^2=1.27, df=3, p=0.74)					
50세 미만	19.7	44.1	23.7	12.5	100.0(152)
50세 이상	21.6	47.7	18.0	12.6	100.0(111)
전공별(χ^2=18.70, df=12, p=0.10)					
행정학	15.2	46.7	19.6	18.5	100.0(92)
경제학	5.7	48.6	25.7	20.0	100.0(35)
사회복지학	30.6	38.9	22.2	8.3	100.0(36)
사회학	23.1	51.3	20.5	5.1	100.0(39)
기타	29.5	42.6	21.3	6.6	100.0(61)

3. 국채발행으로 저출산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

매년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간의 차액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동 방안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전문가는 6.9%, '대체로 찬성한다'는 27.9%, '대체로 반대한다'는 45.0%, '매우 반대한다'는 20.2%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65.2%로 찬성의견 34.8%에 비해 두 배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3-3〕 국채발행으로 저출산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전문가의 특성별 국채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3-3>에 제시하였다. 동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의 성별, 연령별 및 전공별 의견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3-3〉 전문가 특성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국채 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 체	6.9	27.9	45.0	20.2	100.0(262)
성별(x^2=5.51, df=4, p=0.24)					
남자	6.7	25.1	45.1	23.1	100.0(195)
여자	7.5	35.8	44.8	11.9	100.0(67)
연령별(x^2=0.85, df=4, p=0.93)					
50세 미만	7.3	27.8	45.0	19.9	100.0(151)
50세 이상	6.3	27.9	45.0	20.7	100.0(111)
전공별(x^2=19.13, df=16, p=0.26)					
행정학	6.5	32.6	40.2	20.7	100.0(92)
경제학	0.0	20.0	48.6	31.4	100.0(35)
사회복지학	14.3	22.9	45.7	17.1	100.0(35)
사회학	7.7	23.1	56.4	12.8	100.0(39)
기타	6.6	31.1	42.6	19.7	100.0(61)

주: 무응답 1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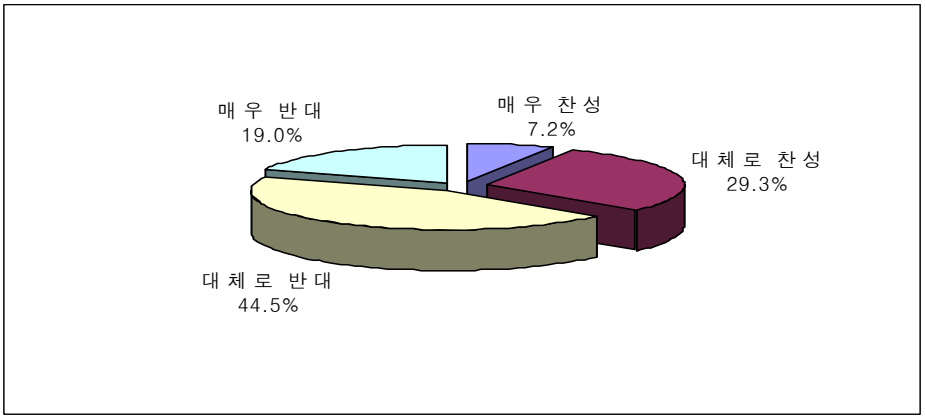
4.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저출산・육아지원 정책으로 미래에 혜택을 받는 집단인 기업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그림 3-4 참조), '매우 찬성한다' 7.2%, '대체로 찬성한다' 29.3%, '대체로 반대한다' 44.5%, '매우 반대한다' 19.0%로 나타나 반대가 63.5%로 찬성(36.5%)에 비해 많았다.

전문가의 성별 및 전공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성별로는 남성전문가가 반대(69.4%)하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여성전문가는 찬성(53.7%)이 반대보다 다소 우세하였다. 전공별로는 모든 전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우세하며, 그 정도는 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사회학자, 행정학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 수

준에서)가 없었다.

〔그림 3-4〕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표 3-4〉 전문가 특성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한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전 체	7.2	29.3	44.5	19.0	100.0(263)
성별(x^2=12.30, df=3, p=0.01)					
남자	6.1	24.5	47.4	21.9	100.0(196)
여자	10.4	43.3	35.8	10.4	100.0(67)
연령별(x^2=1.40, df=3, p=0.71)					
50세 미만	7.9	31.6	42.1	18.4	100.0(152)
50세 이상	6.3	26.1	47.7	19.8	100.0(111)
전공별(x^2=22.96, df=12, p=0.03)					
행정학	4.3	38.0	40.2	17.4	100.0(92)
경제학	0.0	11.4	54.3	34.3	100.0(35)
사회복지학	13.9	19.4	44.4	22.2	100.0(36)
사회학	7.7	30.8	51.3	10.3	100.0(39)
기타	11.5	31.1	41.0	16.4	100.0(61)

현재 추진 중인 범정부적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출산지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 제시한 4가지의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재원의 세부 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표 3-5 참조),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거나(반대 60.4%), 국채를 발행하여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반대 65.2%),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반대 63.5%)을 통한 재원 확보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세부 항목 중 단지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만 6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집단의 경우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타 예산 전환이나 현 예산 재분배를 통한 예산 지원을 선호함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추후 기타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5〉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 방안관련 전문가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별도 세금 징수	6.5	33.1	41.4	19.0	100.0(263)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	20.5	45.6	21.3	12.6	100.0(263)
국채 발행[1)]	6.9	27.9	45.0	20.2	100.0(262)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	7.2	29.3	44.5	19.0	100.0(263)

주: 1) 국채발행에 대한 의견에서는 무응답 1건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제2절 가장 바람직한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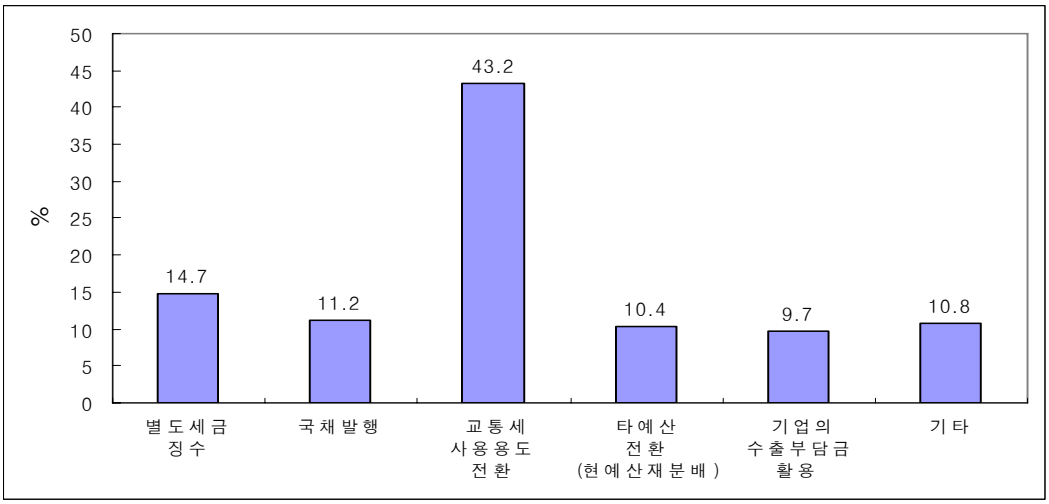
저출산 대책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가 43.2%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견이 21.2%,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한다는 의견이 14.7%,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이 11.2%,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타예산 전환(현예산 재분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전체 의견의 10.4%를 차지했다. 이 외에 저출산대책을 위한 세원 발굴, 복지부 예산 확충, 독신자에 대한 고율세금, 재산세 증대, 출생 후 18세 까지는 양육비를 보조하고 19세 이후부터는 인두세의 개념으로 세금징수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동 의견에 대한 견해차이는 성별로만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전문가의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 다음으로 별도의 세금징수, 국채발행, 기업부담금제 도입 순인 반면, 여성전문가의 경우에는 국채발행, 별도의 세금징수, 기업부담금제 도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에 있어서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가·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닌 교통세와 같은 목적세의 사용용도 전환이나 현예산 재분배를 통한 예산 지원을 선호함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림 3-6〕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표 3-6〉 전문가 특성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구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계(N)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기타	
전체	14.7	11.2	43.2	9.7	21.2	100.0(259)
성별(x^2=13.99 df=5 p=0.0157)						
남자	16.1	9.9	38.5	9.9	25.5	100.0(192)
여자	10.4	14.9	56.7	9.0	9.0	100.0(67)
연령별 x^2=5.26 df=5 p=0.3852						
50세 미만	15.9	10.6	44.4	11.3	17.9	100.0(151)
50세 이상	13.0	12.0	41.7	7.4	25.9	100.0(108)
전공별(x^2=24.83 df=20 p=0.2079)						
행정학	12.4	11.2	42.7	11.2	22.5	100.0(89)
경제학	11.8	11.8	35.3	0.0	41.2	100.0(34)
사회복지학	27.8	13.9	41.7	8.3	8.3	100.0(36)
사회학	10.3	10.3	48.7	12.8	17.9	100.0(39)
기타	14.8	9.8	45.9	11.5	18.0	100.0(61)

주: 무응답 4명 제외.

제4장 저출산대책 정책우선순위관련 의견

본 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출산력 저하는 사망력 저하와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가져오는 현상(이삼식, 2004)이므로 파급효과에 대한 대처를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가운데는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며 육아시설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주변 여건을 바람직하게 조성해 주는 정책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8가지 정책을 선별하여 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정책의 종류는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다.

각 정책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다.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육·유치원비 납부에 있어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 학자금 대출제도의 확대, 기업체 학비보조 확대 등을 포함한다.

둘째,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이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및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있다. 이는 예방접종을 국가가 부담

하거나 저소득 미숙아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신생아 장애예방 검사 실시 및 건강검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넷째,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확충, 육아지원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탄력적 적용,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의무화,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다섯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세제지원(EITC 연계, 소득공제 차등화 등), 보험료 부담 경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각종 수당제도 도입·개선(아동수당제 도입,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차등화) 등이다.

여섯째,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의 내용은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탄력근무제·시간제·시차근무제 등 부분근무제도 도입 및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의 확대, 부의 육아휴직제 참여 확대 등 산전후·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현실화, 여성고용 및 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일곱째,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불임부부 지원(치료비용·불임휴가 등),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이 있다.

여덟째,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학교교육(교과서 인구관련 내용 개편 등), 사회교육(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가족문화 조성),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세부정책 각각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저출산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물어본 결과 1순위로는 보육료·교육비 부담 경감이 33.5%(88명)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가 18.3%(48명),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7.9%(47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1%(37명),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6.5%(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를 살펴보면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23.6%(62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9.4%(51명),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9.0%(5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6.0%(42명), 임신·출산 환경조성 지원 6.8%(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 가운데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4-1〉 저출산대책관련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33.5(88)	19.0(50)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2.3(6)	4.9(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7(6)	4.9(13)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7.9(47)	23.6(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1(37)	19.4(51)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8.3(48)	16.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4.9(13)	6.8(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6.5(17)	5.3(14)
계	100.0(263)	100.0(263)

제2절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대책관련 의식

이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국가의 지속적 예산 지원에 대한 의견,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별 8가지 정책에 따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저출산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지지하는 전문가의 수는 20명 미만으로 대표성이 결여될 수 있어 분석을 생략하였다.

1.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지도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1순위로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응답한 경우 저출산현상에 대해 64.4%가 매우 심각, 32.2%가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가 대부분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저출산현상에 대해 88.0%(매우 심각 64.0%, 대체로 심각 24.0%)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보육료·교육비 부담이 주요한 저출산 원인이므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 현상에 대해 63.8%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심각하다가 29.8%로 나타났다. 반

면, 저출산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6.4%로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9.0%, 대체로 심각하다가 32.8%로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2%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9.5%,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5.1%로 나타나 94.6%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정책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도 1순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저출산에 따른 당면 과제로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87.5%(매우 심각 60.4%, 대체로 심각 27.1%)가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90.5%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매우 심각 61.9%, 대체로 심각 28.6%). 별로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9.5%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으나 대다수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개별정책들의 우선순위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표 4-2〉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계(N)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하지않음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64.4	32.2	3.4	0.0	100.0(87)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60.4	27.1	12.5	0.0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63.8	29.8	4.3	2.1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59.5	35.1	5.4	0.0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52.9	35.3	11.8	0.0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69.2	15.4	15.4	0.0	100.0(13)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66.7	33.3	0.0	0.0	100.0(6)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42.9	42.9	0.0	14.3	100.0(7)
전체	61.8	30.9	6.5	0.8	100.0(262)

주: 1) x^2=31.98, df=28, p=0.28
2) 무응답 1명 제외.

〈표 4-3〉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계(N)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	전혀 심각하지 않음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59.0	32.8	8.2	0.0	100.0(61)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62.7	33.3	3.9	0.0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64.0	24.0	10.0	2.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61.9	28.6	7.1	2.4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72.2	27.8	0.0	0.0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57.1	28.6	14.3	0.0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84.6	15.4	0.0	0.0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30.8	69.2	0.0	0.0	100.0(13)
전체	61.8	30.9	6.5	0.8	100.0(262)

주: 1) x^2=28.89, df=28, p=0.63
2) 무응답 1명 제외.

2. 정책우선순위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국가가 출산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우선순위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의 개입 정도 및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예산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책우선순위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 지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국가의 지속적 예산 지원에 대해 97.7%가 찬성하였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률은 90.0%로 나타나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에 따른 개별 가정의 가계부담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해 93.5%(52.2% 매우 찬성, 41.3% 대체로 찬성)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96.8%(51.6% 매우 찬성, 45.2% 대체로 찬성)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의 경우 바람직한 자녀 출산 및 양

육 여건 조성에 있어 국가의 지속적 개입 및 보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해 전체 94.6%(매우 찬성 59.5%, 대체로 찬성 35.1%)이 그리고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는 96.1%(매우 찬성 56.9%, 대체로 찬성 39.2%)이 찬성하였다. 이는 자녀양육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지속적 예산 지원을 통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8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45.8%, 대체로 찬성 43.8%).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의견이 90.2%(매우 찬성 58.5%, 대체로 찬성 31.7%)로 나타났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9.7%(매우 반대 2.4%, 대체로 반대 7.3%)는 국가의 예산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지원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현재의 지정된 예산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정책우선순위별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예산지원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배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의 재원조달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출산력 제고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62.5	35.2	2.3	0.0	100.0(88)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45.8	43.8	8.3	2.1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52.2	41.3	4.3	2.2	100.0(46)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59.5	35.1	5.4	0.0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41.2	41.2	11.8	5.9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46.2	38.5	0.0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8.6	71.4	0.0	0.0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66.7	33.3	0.0	0.0	100.0(6)
전체	54.2	39.3	4.6	1.9	100.0(262)

주: 1) x^2=33.23, df=28, p=0.23
2) 무응답 1명 제외.

〈표 4-5〉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출산력 제고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출산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51.6	45.2	3.2	0.0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56.9	39.2	3.9	0.0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52.0	38.0	4.0	6.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58.5	31.7	7.3	2.4	100.0(41)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66.7	27.8	0.0	5.6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50.0	35.7	14.3	0.0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61.5	38.5	0.0	0.0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30.8	61.5	7.7	0.0	100.0(13)
전체	54.2	39.3	4.6	1.9	100.0(262)

주: 1) x^2=25.32, df=28, p=0.61
2) 무응답 1명 제외.

3.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견해

출산력 저하는 사망력 저하와 상호작용을 하여 인구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상까지도 포괄한다(이삼식 외, 2004).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는 저출산 문제를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별도의 세금징수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세금 징수라는 부담스러운 측면 역시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해 43.2%(매우 찬성 5.7%, 대체로 찬성 37.5%)가 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56.8%(매우 반대 14.8%, 대체로 반대 42.0%)로 나타나 찬성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0%로 동등하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 10.6%, 대체로 찬성 34.0%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55.3%(매우 반대 21.3%, 대체로 반대 34.0%)로 찬성에 비해 10.7%p 더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로 찬성이 30.6%로 나타나 찬성의견

에 비해 반대 의견이 38.7%p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 예산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 이외의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재원확보 방안으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40.5%(매우 찬성 13.5%, 대체로 찬성 27.0%)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은 59.5%로 찬성의견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았다. 동 정책을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 43.1%, 반대 56.9%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에 비해 13.7% p 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징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2.1%, 대체로 찬성 29.2%, 대체로 반대가 54.2%, 매우 반대 14.6%로 반대 의견이 37.5%더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반대의견의 비율이 19.0%p 더 높게 나타나 1순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금징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전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우려의 결과 및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표 4-6〉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관련 견해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5.7	37.5	42.0	14.8	100.0(88)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2.1	29.2	54.2	14.6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0.6	34.0	34.0	21.3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3.5	27.0	43.2	16.2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0.0	29.4	35.3	35.3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0.0	38.5	23.1	38.5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4.3	14.3	42.9	28.6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0.0	50.0	33.3	16.7	100.0(6)
전체	6.5	33.1	41.4	19.0	100.0(263)

x^2=21.99, df=21, p=0.40

〈표 4-7〉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관련 견해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징수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0.0	30.6	53.2	16.1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3.9	39.2	39.2	17.6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4.0	36.0	32.0	18.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1.9	28.6	33.3	26.2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1.1	27.8	44.4	16.7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0.0	28.6	42.9	28.6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7.7	53.8	23.1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0.0	15.4	69.2	15.4	100.0(13)
전체	6.5	33.1	41.4	19.0	100.0(263)

x^2=27.25, df=21, p=0.16

4. 정책우선순위별 교통세 사용용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세금 징수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 등 때문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 대신에 2006년 폐지 예정인 현재의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여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일반의 의견을 정책우선순위별로 살펴보았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제시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64.8%가 찬성(매우 찬성 18.2%, 대체로 찬성 46.6%)하여 반대의견(35.2%)에 비해 찬성의견이 29.4%p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에도 찬성이 80.0%로 찬성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보육료·가계부담 경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이 68.1%로 나타나(매우 찬성 23.4%, 대체로 찬성 44.7%) 반대의견(매우 반대 8.5%, 대체로 반대 23.4%)에 비해 찬성률이 36.2%p 더 높았다. 2순위에서도 찬성의견이 62.9%로 1순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의견이 75.6%(매우 찬성 27.0%, 대체로 찬성 48.6%)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의견의 경우 대체로 반대

16.2%, 매우 반대 8.1%로 반대의견에 비해 찬성의견이 51.3%p 더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찬성비율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25.5%p로 더 낮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별도의 세금 징수에 비해서 교통세 용도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함을 지지하는 의견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6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18.8%, 대체로 찬성 45.8%). 반대하는 의견은 35.4%(매우 반대 14.6%, 대체로 반대가 20.8%)로 찬성률이 29.2%p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61.9%가 찬성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38.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통세 사용용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 역시 존재하는데 이는 교통세 사용용도 변환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처 및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의 도입 등의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8〉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교통세의 저출산대책 사용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여 저출산대책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8.2	46.6	23.9	11.4	100.0(88)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8.8	45.8	20.8	14.6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23.4	44.7	23.4	8.5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7.0	48.6	16.2	8.1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17.6	41.2	11.8	29.4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5.4	38.5	30.8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0.0	57.1	28.6	14.3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50.0	33.3	0.0	16.7	100.0(6)
전체	20.5	45.6	21.3	12.5	100.0(263)

주: 1) x^2=15.23, df=21, p=0.81

〈표 4-9〉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교통세의 저출산대책 사용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여 저출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2.9	50.0	22.6	14.5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1.6	41.2	25.5	11.8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34.0	46.0	18.0	2.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21.4	40.5	21.4	16.7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22.2	50.0	0.0	27.8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14.3	71.4	7.1	7.1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15.4	38.5	30.8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7.7	30.8	46.2	15.4	100.0(13)
전체	20.5	45.6	21.3	12.5	100.0(263)

주: 1) x^2=30.57, df=21, p=0.08

5. 정책우선순위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국채발행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 국민에게 세금의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금징수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재원운용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국채발행을 통해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29.9%(매우 찬성 6.9%, 대체로 찬성 23.0%)가 찬성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은 70.1%(매우 반대 18.4%, 대체로 반대 51.7%)로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의견이 40.2%p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16.0%p였다. 즉,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주요한 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국채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38.3%가 찬성(매우 찬성 10.6%, 대체로 찬성 27.7%) 61.7%가 반대(매우 반대 17.0%, 대체로 반대 44.7%)하여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에 비해 23.4%p 더 높았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이 34.4%, 반대가 65.6%로 반대 의견이 31.2%p더 높게 나타났다. 즉,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는 찬성률이 29.7%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5.4%, 대체로 찬성 24.3%). 반대 의견은 70.3%(매우 반대 18.9%, 대체로 반대 51.4%)로 찬성에 비해 40.6%p 더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31.4%가 찬성(매우 찬성 5.9%, 대체로 찬성 25.5%), 68.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37.2%였다. 즉, 조사 결과에서 1순위와 2순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정책적 우위에 두고 있는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에 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 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찬성의견이 39.6%(매우 찬성 4.2%, 대체로 찬성 35.4%), 반대 의견은 60.4%(매우 반대 22.9%, 대체로 반대 37.5%)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20.8%p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42.8%p로 더 높았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와 관련된 정책을 우선시 하는 전문가의 경우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책우선순위별로 국채발행을 통한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 예산의 재분배 및 타 예산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표 4-10〉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6.9	23.0	51.7	18.4	100.0(87)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4.2	35.4	37.5	22.9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0.6	27.7	44.7	17.0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5.4	24.3	51.4	18.9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0.0	35.3	35.3	29.4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23.1	38.5	15.4	23.1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0.0	14.3	71.4	14.3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0.0	33.3	33.3	33.3	100.0(6)
전체	6.9	27.9	45.0	20.2	100.0(262)

주: 1) x^2=21.90, df=28, p=0.79
2) 무응답 1명 제외.

〈표 4-11〉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6	32.8	44.3	21.3	100.0(61)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5.9	25.5	43.1	25.5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4.0	28.0	42.0	16.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2.4	26.2	50.0	21.4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1.1	33.3	33.3	22.2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7.1	35.7	50.0	7.1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15.4	7.7	61.5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7.7	23.1	46.2	23.1	100.0(13)
전체	6.9	27.9	45.0	20.2	100.0(262)

주: 1) x^2=20.12, df=28, p=0.86
2) 무응답 1명 제외.

6. 정책우선순위별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저출산예산 보전방법 관련 견해

본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한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담금 제도는 공공재원의 조달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취약한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특히 기업에게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부담률로 부과하는 방식인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36.3%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4.5%, 대체로 찬성 31.8%). 반대 의견은 63.7%(매우 반대 18.2%, 대체로 반대 45.5%)로 나타나 찬성의견에 비해 27.4%p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이 46.0%(매우 찬성 10.0%, 대체로 찬성 36.0%), 반대 의견은 54.0%(매우 반대 14.0%, 대체로 반대 40.0%)로 나타나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 의견이 8.0%p 높았다. 즉,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정책 1순위로 응답한 경우 반대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기업체 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42.6%(매우 찬성 12.8%, 대체로 찬성 29.8%), 반대 의견은 57.4%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에도 1순위의 경우와 같이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에 비해 29.0%p 높게 나타났다. 즉,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응답한 경우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43.2%(매우 찬성 10.8%, 대체로 찬성 32.4%)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8%였다. 2순위를 살펴보면 찬성률이 35.3%(매우 찬성 11.8%, 대체로 찬성 23.5%) 반대 의견은 64.7%(매우 반대 19.6%, 대체로 반대 45.1%)로 찬성의견에 비해 반대 의견이 29.4%p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반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는 2순위로 응답한 경우 반대율이 더 높았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기업의 부담금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29.2%로 나타났다(매우 찬성 6.3%, 대체로 찬성 22.9%). 반대 의견은 70.8%(매우 반대 20.8%, 대체로 반대 50.0%)로 찬성의견에 비해 41.6%p 더 높았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도 찬성의견이 33.3%, 반대의견이 66.7%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반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전문가들의 기업체 부담금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부담률로 부과하는 방식인 기업체 부담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널리 확산되지 못한 점과 부담금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기업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4.5	31.8	45.5	18.2	100.0(88)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6.3	22.9	50.0	20.8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2.8	29.8	42.6	14.9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0.8	32.4	48.6	8.1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11.8	17.6	29.4	41.2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0.0	46.2	23.1	30.8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0.0	14.3	71.4	14.3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0.0	33.3	33.3	33.3	100.0(6)
전체	7.2	29.3	44.5	19.0	100.0(263)

주: x^2=22.53, df=21, p=0.36

〈표 4-13〉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기업 부담금제를 통한 저출산예산 보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계(N)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0.0	35.5	41.9	22.6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1.8	23.5	45.1	19.6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0.0	36.0	40.0	14.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7.1	26.2	47.6	19.0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1.1	38.9	33.3	16.7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7.1	21.4	57.1	14.3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7.7	23.1	46.2	23.1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7.7	7.7	61.5	23.1	100.0(13)
전체	7.2	29.3	44.5	19.0	100.0(263)

주: x^2=16.06, df=21, p=0.77

7.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견해

본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겠다. 이는 본 조사에서 다룬 재원확보 방안들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별 선호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원 확보 방안 개발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제시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47.7%), 기타(20.5%),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15.9%),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8.0%),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6.8%)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44.0%),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14.0%),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14.0%), 기타(14.0%),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12.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순으로 예산확충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기타 의견이 각각 나타나 다른 방식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존재했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48.9%, 기타 17.0%,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12.8%,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12.8%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50.0%, 기타 24.2%,국

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12.9%,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6.5%, 기업의 수출 부담금 활용 6.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타 항목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본 조사에서 제시된 방법 이외에 기존 예산의 적절한 활용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32.4%,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하는 방안 21.6%, 기업의 수출 부담금 활용 방안 16.2%,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방안 13.5%, 기타 13.5%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39.2%,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하는 방안 23.5%, 기타방법 15.7%,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9.8%,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7.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하는 방안, 기업의 수출 부담금 활용 방안,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재정지원이라는 성격상 교통세 용도 전환, 별도의 세금 징수 등 재원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41.7%, 기타방법 29.2%,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12.5%,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10.4%,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4.2%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 35.7%,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19.0%, 기타방법 19.0%,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14.3%,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9.5%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저출산 대책 예산 확충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사용 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타방법,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시된 4가지 재원확보방안 중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 확보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전체적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별도의 세금 징수,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개별 정책 항목에 따라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에 대한 선호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요한 정책의 성격이 재정지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타의견의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세금징수, 국채발행, 교통세 용도 전환 등 이외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4〉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 위한 좋은 방법					계(N)
	별도 세금 징수 활용	국채 발행 수입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 부담금 활용	기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5.9	8.0	47.7	6.8	20.5	100.0(88)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2.5	10.4	41.7	4.2	29.2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2.8	6.4	48.9	12.8	17.0	100.0(47)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1.6	13.5	32.4	16.2	13.5	100.0(37)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5.9	29.4	23.5	11.8	29.4	100.0(1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5.4	15.4	38.5	15.4	15.4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0.0	14.3	42.9	14.3	28.6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16.7	16.7	50.0	0.0	16.7	100.0(6)
전체	14.4	11.0	42.6	9.5	20.9	100.0(263)

주: x^2=25.50, df=35, p=0.88

〈표 4-15〉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단위: %, 명)

구 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 위한 좋은 방법					계(N)
	별도 세금 징수 활용	국채 발행 수입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 부담금 활용	기타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6.5	12.9	50.0	6.5	24.2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3.5	9.8	39.2	7.8	15.7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4.0	14.0	44.0	12.0	14.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9.0	9.5	35.7	14.3	19.0	100.0(42)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5.6	16.7	50.0	16.7	11.1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7.1	0.0	71.4	0.0	21.4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23.1	7.7	30.8	0.0	38.5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5.4	7.7	7.7	15.4	53.8	100.0(13)
전체	14.4	11.0	42.6	9.5	20.9	100.0(263)

주: x^2=41.90, df=35, p=0.20

8. 정책우선순위별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한 견해

이 절에서는 정책우선순위별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즉,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은 자녀수 증가에 따른 보육 및 양육비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소득보장의 개념을 띄고 있다.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은 이상의 두 가지 지원의 성격을 절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 지원 기준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별 전문가 견해는 향후 일반 국민의 가족 및 양육수당 지급 원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지원 64.4%,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17.2%,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12.6%,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5.7%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응답한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78.0%,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12.0%,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6.0%,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4.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자녀 보육비·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지적한 결과로 보인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

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 67.4%,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19.6%,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8.7%,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 61.3%,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22.6%, 소득 수준에 다른 차등지원 9.7%,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6.5%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1순위와 2순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과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의 선호도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해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 64.9%,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29.7%,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2.7%,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2.7%로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과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 60.8%,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25.5%,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11.8%,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2.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과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지원의 정책 성격상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 79.2%,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10.4%,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8.3%,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이 2.1% 순으로 나타나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선택한 경우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

등지원 75.6%,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9.8%,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7.3%,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7.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경우 가구 지원의 기준에 대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과 자녀수라는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가구지원의 성격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른 지원이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보다 더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정책우선순위별(1순위) 바람직한 가구지원의 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구 지원의 기준				계(N)
	자녀수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고려한 차등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7.2	12.6	64.4	5.7	100.0(87)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10.4	8.3	79.2	2.1	100.0(48)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8.7	19.6	67.4	4.3	100.0(46)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9.7	2.7	64.9	2.7	100.0(37)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30.8	0.0	61.5	7.7	100.0(13)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0.0	5.9	82.4	11.8	100.0(17)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14.3	28.6	57.1	0.0	100.0(7)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16.7	0.0	83.3	0.0	100.0(6)
전체	15.7	10.7	69.0	4.6	100.0(261)

주: 1) x^2=30.58 df=28 p=0.34.
2) 무응답 2명 제외.

〈표 4-17〉 정책우선순위별(2순위) 바람직한 가구지원의 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구 지원의 기준				계(N)
	자녀수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고려한 차등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22.6	9.7	61.3	6.5	100.0(62)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25.5	11.8	60.8	2.0	100.0(51)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12.0	6.0	78.0	4.0	100.0(50)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9.8	7.3	75.6	7.3	100.0(41)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11.1	22.2	66.7	0.0	100.0(18)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7.1	21.4	71.4	0.0	100.0(14)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0.0	7.7	92.3	0.0	100.0(13)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8.3	16.7	58.3	16.7	100.0(12)
전체	15.7	10.7	69.0	4.6	100.0(261)

주: 1) x^2=37.54, df=28 p=0.11.

2) 무응답 2명 제외.

제5장 결론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1.2 미만의 세계적으로 낮은 이른바 극저출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극히 낮은 출산수준의 장기간 지속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노동력 고령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자본투자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노인층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노동력은 줄어들어 사회보장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미래사회 전반을 변하게 할 것이다.

저출산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저출산관련 정책을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일단 선택된 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까지 회복시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관점, 사회복지적인 관점, 가족복지적인 관점, 교육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 등 다방면에 걸쳐 효율적인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들은 단기간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함은 불가피하다.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든지 일반국민 혹은 어느 특정집단의 부담을 요한다. 즉,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일반국민이나 특정 이해 당사집단의 동의 내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원확보방안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63명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공과 상관없이 전문가 집단의 대부분은 현재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전문가 대부분은 국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가구소득수준과 자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단순히 자녀수보다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부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소득층에서의 자녀출산은 경제적 문제 이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가구지원기준은 자녀수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녀수만으로도 지원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견해는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방안에 대해서만 반대보다 찬성이 우세하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경향이 더 우세하다. 반대정도는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 국채발행, 별도의 세금징수 순이다. 요컨대, 전문가들 사이에는 저출산의 대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 국민전체나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결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출산대책을 위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2006년도에 폐지예정인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세금징수, 국채 발행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대책을 위한 각종 가능한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이다. 전문가들은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순으로 정책의 긴요성 및 중요성을 책정하고 있다. 요컨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어서 자녀양육환경 개선(일과 가정간의 양립 제고,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외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선 정책들에 비해 그 비중은 낮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및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능한 여러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전문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앞서 제시한 재원확보방안들이나 정책들 모두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나 소득계층 및 가구와 여성의 특성에 따라 재원확보방안 또는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도가 높은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책적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부록 1] 설문지

□□ - □□□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력을 받아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10개 관련 학회 회원을 표본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방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등)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7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 원 장 김 용 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여 성 가 족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인구정책개발센터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
(☏) 02-380-8267/8182 (Fax) 02-383-2340 (E-mail) jysun27@kihasa.re.kr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대체로 심각한 문제이다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 출산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가 출산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3. 귀하는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확충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4. 귀하는 2006년 폐지 예정인 현재의 교통세 사용용도를 전환하여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5. 귀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6. 귀하는 기업에게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부담률로 부과하는 방식인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육아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의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대체로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7. 귀하는 다음 중 저출산 대책의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②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③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④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⑤ 기타(_____)

8. 귀하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②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③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④ 기준없이 동등하게 지원

9. 저출산 대책을 위해 채택이 가능한 아래의 여러 정책들을 중요도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1위~ 8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유형	내용	우선순위
① **보육료 · 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 보육 · 유치원비 부모부담 완화 ·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다자녀가정 학자금대출제도 확대 · 기업체 학비보조 확대 등	
②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우선 제공 · 아파트 분양권 우선 제공 등	
③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예방접종 국가 부담 · 저소득 미숙아 등 치료비 지원 확대 ·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및 건강검진 강화 등	
④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확충 · 육아지원시설 운영시간 탄력적 적용 · 대규모 아파트 단지 보육시설 의무화 ·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세제지원(EITC연계, 소득공제 차등화 등) · 보험료 부담 경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 각종 수당제도 도입 · 개선(아동수당제 도입,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차등화) 등	
⑥ **자녀양육과 직장일간의 양립 제고**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탄력근무제, 시간제, 시차근무제 등 부분근무제도 도입 및 확대 · 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의 확대, 부의 육아휴직제 참여확대 등 산전후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현실화 · 여성고용 및 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⑦ **임신 · 출산환경조성 지원**	·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 불임부부 지원(치료비용, 불임휴가 등) ·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⑧ **출산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학교교육(교과서 인구관련 내용 개편 등) · 사회교육(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가족문화 조성) · 홍보 강화 등	

응답자의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정부행정기관
□④ 민간・시민단체 □⑤ 기타(_____)

10-1. 귀하는 이 기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_____)년

11. 귀하의 주된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사회과학일반 □② 정치외교학 □③ 경제학 □④ 농업경제학
□⑤ 경영학 □⑥ 회계학 □⑦ 무역학 □⑧ 사회학
□⑨ 사회복지학 □⑩ 지역학 □⑪ 인류학 □⑫ 교육학
□⑬ 법학 □⑭ 행정학 □⑮ 정책학 □⑯ 지리학
□⑰ 지역개발 □⑱ 관광학 □⑲ 신문방송학 □⑳ 군사학 □㉑ 기타

11-1. 귀하가 이 분야를 연구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3. 귀하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조사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이 조사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조사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에 대한 사후 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부록 2] 통계표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부표 1〉 연구년수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계(N)
10년 미만	58.8	26.5	11.8	2.9	100.0(34)
10-20년 미만	64.2	30.9	4.9	0.0	100.0(81)
20-25년 미만	64.0	25.3	10.7	0.0	100.0(75)
25년 이상	58.1	38.7	1.6	1.6	100.0(62)
전체	61.9	30.6	6.7	0.8	100.0(262)

주:1) χ^2=16.62, df=16, p=0.41
2)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2〉 소속기관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계(N)
대학	64.1	29.3	6.1	0.5	100.0(198)
기타	54.7	35.9	7.8	1.6	100.0(64)
전체	61.8	30.9	6.5	0.8	100.0(262)

주: 1) χ^2=2.66, df=4, p=0.62
2)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3〉 근무년수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대체로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계(N)
10년 이하	60.2	30.6	8.2	1.0	100.0(98)
10-20년 미만	54.9	37.8	7.3	0.0	100.0(82)
20년 이상	66.7	27.8	4.2	1.4	100.0(72)
전체	60.3	32.1	6.7	0.8	100.0(252)

주: 1) x^2=2.66, df=4, p=0.62
2) 무응답 1명 제외.

2.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부표 4〉 연구년수별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미만	44.1	47.4	2.9	5.9	100.0(34)
10-20년 미만	56.8	37.0	4.9	1.2	100.0(81)
20-25년 미만	54.7	40.0	5.3	0.0	100.0(75)
25년 이상	55.6	34.9	4.8	3.2	100.0(63)
전체	54.0	39.2	4.6	1.9	100.0(263)

주: 1) x^2=11.17, df=16, p=0.80

2) 연구년수 10명 무응답, 의견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5〉 근무기관별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대학	55.3	37.2	5.5	1.5	100.0(199)
기타	50.0	45.3	1.6	3.1	100.0(64)
전체	54.0	39.2	4.6	1.9	100.0(263)

주: 1) x^2=3.72, df=4, p=0.45

2)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6〉 근무년수별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이하	52.5	43.4	2.0	2.0	100.0(99)
10-20년 미만	52.4	40.2	6.1	1.2	100.0(82)
20년 이상	52.8	36.1	6.9	2.8	100.0(72)
전체	54.0	39.2	4.6	1.9	100.0(263)

주: 1) χ^2=11.84, df=12, p=0.46

2) 근속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의견 무응답 1명 제외.

3. 별도세금징수에 대한 의견

〈부표 7〉 연구년수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 징수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미만	2.9	32.4	41.2	23.5	100.0(34)
10-20년 미만	2.5	39.5	39.5	18.5	100.0(81)
20-25년 미만	8.0	29.3	44.0	18.7	100.0(75)
25년 이상	12.7	27.0	41.3	19.0	100.0(63)
전체	6.7	32.4	41.5	19.4	100.0(253)

주: 1) x^2=11.27, df=12, p=0.51

2) 연구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부표 8〉 근무기관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 징수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대학	6.5	34.2	39.2	20.1	100.0(199)
기타	6.3	29.7	48.4	15.6	100.0(64)
전체	6.5	33.1	41.4	19.0	100.0(263)

주: x^2=1.81, df=3, p=0.61

〈부표 9〉 근무년수별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을 위한 별도 세금 징수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이하	4.0	34.3	44.4	17.2	100.0(99)
10-20년 미만	7.3	25.6	46.3	20.7	100.0(82)
20년 이상	5.6	40.3	34.7	19.4	100.0(72)
전체	5.5	33.2	42.3	19.0	100.0(253)

주: 1) χ^2=15.14, df=9, p=0.09

2) 근속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4.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에 대한 의견

〈부표 10〉 연구년수별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미만	17.6	50.0	17.6	14.7	100.0(34)
10-20년 미만	17.3	45.7	25.9	11.1	100.0(81)
20-25년 미만	20.0	45.3	22.7	12.0	100.0(75)
25년 이상	28.6	39.7	17.5	14.3	100.0(63)
전체	20.9	44.7	21.7	12.6	100.0(253)

주: 1) x^2=7.63, df=12, p=0.81

2) 연구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부표 11〉 소속기관별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대학	21.1	43.7	20.1	15.1	100.0(199)
기타	18.8	51.6	25.0	4.7	100.0(64)
전체	20.5	45.6	21.3	12.5	100.0 (263)

주: x^2=5.49, df=3, p=0.14

〈부표 12〉 근무년수별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저출산 대책 예산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이하	17.2	46.5	23.2	13.1	100.0(99)
10-20년 미만	22.0	47.6	19.5	11.0	100.0(82)
20년 이상	22.2	44.4	18.1	15.3	100.0(72)
전체	20.2	46.2	20.6	13.0	100.0(253)

주: 1) χ^2=5.97, df=9, p=0.74

2) 근속 연수 무응답 10명 제외.

5. 국채발행에 대한 의견

〈부표 13〉 연구년수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미만	2.9	41.2	29.4	26.5	100.0(34)
10-20년 미만	10.0	20.0	53.8	16.3	100.0(80)
20-25년 미만	5.3	30.7	41.3	22.7	100.0(75)
25년 이상	7.9	27.0	44.4	20.6	100.0(63)
전체	7.1	27.8	44.4	20.6	100.0(252)

주: 1) χ^2=15.33, df=16, p=0.51

2) 연구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견해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14〉 소속기관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대학	7.6	25.8	46.0	20.7	100.0(199)
기타	4.7	34.4	42.2	18.8	100.0(64)
전체	6.9	27.9	45.0	20.2	100.0(262)

주: 1) χ^2=2.45, df=4, p=0.65

2) 무응답 1명 제외.

〈부표 15〉 근무년수별 국채발행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이하	8.1	31.3	41.4	19.2	100.0(99)
10-20년 미만	4.9	20.7	48.8	25.6	100.0(82)
20년 이상	6.9	31.9	43.1	18.1	100.0(72)
전체	6.7	28.1	44.3	20.9	100.0(253)

주: 1) χ^2=34.2473 df=12 p=0.0009

2) 근속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견해 무응답 1명 제외.

6. 기업의 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

〈부표 16〉 연구년수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미만	2.9	38.2	38.2	20.6	100.0(34)
10-20년 미만	11.1	30.9	39.5	18.5	100.0(81)
20-25년 미만	4.0	30.7	46.7	18.7	100.0(75)
25년 이상	9.5	19.0	52.4	19.0	100.0(63)
전체	7.5	28.9	44.7	19.0	100.0(253)

주: 1) x^2=10.34, df=12, p=0.59

2) 연구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부표 17〉 소속기관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대학	7.0	28.6	43.7	20.6	100.0(199)
기타	7.8	31.3	46.9	14.1	100.0(64)
전체	7.2	29.3	44.5	19.0	100.0(263)

주: x^2=1.35, df=3, p=0.72

〈부표 18〉 근무년수별 기업의 부담금제를 통해 저출산 대책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10년 이하	8.1	33.3	39.4	19.2	100.0(99)
10-20년 미만	4.9	28.0	51.2	15.9	100.0(82)
20년 이상	6.9	26.4	43.1	23.6	100.0(72)
전체	6.7	29.6	44.3	19.4	100.0(253)

주: 1) x^2=7.26, df=9, p=0.61

2) 근속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7. 저출산 대책 예산확충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부표 19〉 연구년수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단위: %, 명)

구분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기타	계(N)
10년 미만	9.1	12.1	45.5	9.1	24.2	100.0(33)
10-20년 미만	15.2	15.2	43.0	13.9	12.7	100.0(79)
20-25년 미만	12.0	8.0	45.3	8.0	26.7	100.0(75)
25년 이상	17.7	8.1	41.9	6.5	25.8	100.0(62)
전체	14.1	10.8	43.8	9.6	21.7	100.0(249)

주: 1) x^2=16.47, df=20, p=0.69

2) 연구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방법 무응답 4명 제외

〈부표 20〉 소속기관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단위: %, 명)

구분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기타	계(N)
대학	17.9	11.3	41.5	9.2	20.0	100.0(195)
기타	4.7	10.9	48.4	10.9	25.0	100.0(64)
전체	14.7	11.2	43.2	9.7	21.2	100.0(259)

주: 1) x^2=8.40, df=5, p=0.14

2) 무응답 4명 제외.

〈부표 21〉 근무년수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

(단위: %, 명)

구분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여 활용	국채를 발행한 수입금 활용	교통세 사용용도 전환을 통한 재원확보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	기타	계(N)
10년 이하	15.2	14.1	40.4	14.1	16.2	100.0(99)
10-20년 미만	7.4	8.6	53.1	7.4	23.5	100.0(81)
20년 이상	21.4	10.0	37.1	5.7	25.7	100.0(70)
전체	14.4	11.2	43.6	9.6	21.2	100.0(250)

주: 1) χ^2=22.39, df=15, p=0.10

2) 연구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방법 무응답 4명 제외

8.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부표 22〉 연구년수별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계(N)
10년 미만	17.6	8.8	64.7	8.8	100.0(34)
10-20년 미만	14.8	8.6	70.4	6.2	100.0(81)
20-25년 미만	12.2	12.2	71.6	4.1	100.0(74)
25년 이상	17.7	11.3	69.4	1.6	100.0(62)
전체	15.1	10.4	69.7	4.8	100.0(251)

주: 1) x^2=9.64, df=16, p=0.89

2) 연구 년수 무응답 10명 제외, 가구 지원 기준 무응답 2명 제외.

〈부표 23〉 소속기관별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계(N)
대학	16.2	9.6	69.0	5.1	100.0(197)
기타	14.1	14.1	68.8	3.1	100.0(64)
전체	15.7	10.7	69.0	4.6	100.0(261)

주: 1) x^2=2.08, df=4, p=0.72

2) 무응답 2명 제외.

〈부표 24〉 근무년수별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

(단위: %, 명)

구분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자녀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 고려한 차등 지원	기준 없이 동등하게 지원	계(N)
10년 이하	16.2	10.1	66.7	7.1	100.0(99)
10-20년 미만	11.3	13.8	71.3	3.8	100.0(80)
20년 이상	20.8	9.7	66.7	2.8	100.0(72)
전체	15.9	11.2	68.1	4.8	100.0(251)

주: 1) χ^2=12.01, df=12, p=0.45

2) 근속 년수 무응답 10명, 가구 지원의 기준 무응답 2명 제외.

9. 정책우선순위

〈부표 25〉 성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남자	36.2	2.6	3.1	17.3	14.8	13.8	6.1	6.1	100.0(196)
여자	25.4	1.5	1.5	19.4	11.9	31.3	1.5	7.5	100.0(67)
전체	33.5	2.3	2.7	17.9	14.1	18.3	4.9	6.5	100.0(263)

주: x^2=13.62, df=7, p=0.06

〈부표 26〉 성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계(N)
남자	20.4	6.1	4.6	21.4	19.9	13.8	7.7	6.1	100.0(196)
여자	14.9	1.5	6.0	29.9	17.9	22.4	4.5	3.0	100.0(67)
전체	19.0	4.9	4.9	23.6	19.4	16.0	6.8	5.3	100.0(263)

주: x^2=8.73, df=7, p=0.27

〈부표 27〉 연령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조성	계(N)
50세미만	36.8	1.3	3.9	17.8	13.2	17.8	4.6	4.6	100.0(152)
50세이상	28.8	3.6	0.9	18.0	15.3	18.9	5.4	9.0	100.0(111)
전체	33.5	2.3	2.7	17.9	14.1	18.3	4.9	6.5	100.0(263)

주: x^2=7.21, df=7, p=0.41

〈부표 28〉 연령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50대 미만	20.4	3.9	5.3	24.3	21.1	13.8	5.9	5.3	100.0(152)
50대 이상	17.1	6.3	4.5	22.5	17.1	18.9	8.1	5.4	100.0(111)
전체	19.0	4.9	4.9	23.6	19.4	16.0	6.8	5.3	100.0(263)

주: x^2=3.26, df=7, p=0.86

〈부표 29〉 전공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행정학	38.0	3.3	2.2	16.3	13.0	9.8	8.7	8.7	100.0(92)
경제학	28.6	2.9	5.7	14.3	14.3	25.7	2.9	5.7	100.0(35)
사회복지학	41.7	2.8	2.8	19.4	11.1	16.7	2.8	2.8	100.0(61)
사회학	25.6	2.6	2.6	28.2	12.8	20.5	0.0	7.7	100.0(39)
기타	29.5	0.0	1.6	14.8	18.0	26.2	4.9	4.9	100.0(36)
전체	33.5	2.3	2.7	17.9	14.1	18.3	4.9	6.5	100.0(263)

주: x^2=24.07, df=28, p=0.68

〈부표 30〉 전공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행정학	15.2	9.8	3.3	19.6	17.4	18.5	8.7	7.6	100.0(92)
경제학	17.1	0.0	8.6	25.7	20.0	11.4	8.6	8.6	100.0(35)
사회복지학	16.7	2.8	11.1	22.2	25.0	16.7	2.8	2.8	100.0(61)
사회학	17.9	0.0	2.6	28.2	17.9	23.1	5.1	5.1	100.0(39)
기타	27.9	4.9	3.3	26.2	19.7	9.8	6.6	1.6	100.0(36)
전체	19.0	4.9	4.9	23.6	19.4	16.0	6.8	5.3	100.0(263)

주: x^2=27.61, df=28, p=0.49

〈부표 31〉 연구년한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계(N)
10년 미만	38.2	2.9	5.9	11.8	17.6	17.6	5.9	0.0	100.0(34)
10-20년 미만	39.5	0.0	2.5	16.0	14.8	13.6	6.2	7.4	100.0(81)
20-25년 미만	29.3	2.7	1.3	21.3	12.0	24.0	4.0	5.3	100.0(75)
25-40년 미만	28.6	3.2	3.2	20.6	11.1	19.0	4.8	9.5	100.0(63)
전체	33.6	2.0	2.8	18.2	13.4	18.6	5.1	6.3	100.0(253)

주: 1) x^2=20.92, df=28, p=0.83

2) 무응답 10명 제외.

〈부표 32〉 연구년한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10년 미만	29.4	8.8	8.8	20.6	14.7	8.8	2.9	5.9	100.0(34)
10-20년 미만	18.5	4.9	2.5	23.5	22.2	17.3	6.2	4.9	100.0(81)
20-25년 미만	21.3	4.0	4.0	24.0	16.0	14.7	8.0	8.0	100.0(75)
25년 이상	14.3	4.8	7.9	23.8	20.6	17.5	7.9	3.2	100.0(63)
전체	19.8	5.1	5.1	23.3	19.0	15.4	6.7	5.5	100.0(253)

주: 1) x^2=18.30, df=28, p=0.92

2) 무응답 10명 제외.

〈부표 33〉 소속기관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대학	33.2	2.5	2.0	19.6	13.6	18.1	4.5	6.5	100.0(199)
기타	34.4	1.6	4.7	12.5	15.6	18.8	6.3	6.3	100.0(64)
전체	33.5	2.3	2.7	17.9	14.1	18.3	4.9	6.5	100.0(263)

주: x^2=3.34, df=7, p=0.85

〈부표 34〉 소속기관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과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계(N)
대학	19.1	4.0	4.5	23.1	20.1	17.6	6.0	5.5	100.0(199)
기타	18.8	7.8	6.3	25.0	17.2	10.9	9.4	4.7	100.0(64)
전체	19.0	4.9	4.9	23.6	19.4	16.0	6.8	5.3	100.0(263)

주: x^2=4.19, df=7, p=0.76

〈부표 35〉 근속년수별 정책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료·교육비 가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 경조성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계(N)
10년 이하	38.4	2.0	3.0	11.1	10.1	21.2	5.1	9.1	100.0(99)
10-20년 미만	29.3	2.4	3.7	22.0	17.1	14.6	4.9	6.1	100.0(82)
20년 이상	26.4	2.8	1.4	23.6	16.7	19.4	5.6	4.2	100.0(72)
전체	32.0	2.4	2.8	18.2	14.2	18.6	5.1	6.7	100.0(253)

주: 1) x^2=19.04, df=21, p=0.58

2) 무응답 10명을 제외.

〈부표 36〉 근속년한별 정책우선순위(2순위)

(단위: %, 명)

구 분	보육료·교육비 가계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직장일간 양립 제고	임신·출산환경조성 지원7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계(N)
10년 미만	16.2	6.1	4.0	26.3	17.2	16.2	9.1	5.1	100.0(99)
10-20년 미만	22.0	1.2	6.1	23.2	19.5	15.9	7.3	4.9	100.0(82)
20년 이상	22.2	6.9	5.6	20.8	20.8	12.5	4.2	6.9	100.0(72)
전체	19.8	4.7	5.1	23.7	19.0	15.0	7.1	5.5	100.0(253)

주: 1) x^2=16.46, df=21, p=0.74

2) 무응답 10명을 제외.